

발의안 제31호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발의안 제31호에 대한 찬성론 ★

31

경기에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주는 벌써 오랫동안 계속 예산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주정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낭비, 남용 또는 과도 차입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보다는 특수 이해 단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이 결국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유권자들과 납세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초당파적 주 감사관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여러 주정부 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운영 개혁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감사관의 제안이 시행되었더라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통합 법원 사건 관리 시스템(Court Case Management System)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58개 카운티 중 단지 7개 카운티를 연결하는 데만 예산을 2억 달러 이상 초과해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난 후 결국 프로젝트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실질적인 균형 예산 달성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검토나 시민 감독 없이 더 이상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1호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 학교나 범죄행 당국, 기타 지역사회의 중요한 목적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수백 달러씩 낭비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늘리거나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늘리지 않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각 조항을 기존 리소스를 사용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세금을 각 시와 카운티에 되돌려 줌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하면

- **시민 의견 반영과 투명성이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주 예산에는 실질적인 투명성이나 공개 보고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반드시 입법부 의원들이 주 예산안 투표를 실시하기 전 최소 3일 동안 공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규 정부 지출에 대해 재정 감독 및 제약을 가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먼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지출 또는 세입 감소분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통제 및 신축성을 강화합니다.** 2012년도 주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의 14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지방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최대 2억 달러를 되돌려 줍니다. 각 도시, 카운티, 학군이 성과를 개선하고 지역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산의 성과와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중점을 측정 가능한 성과 달성에 두도록 하고, 주 입법부와 각 지방정부에 정기 공공 성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추가 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합니다.
-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모든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공개 성과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 대상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 **2년치 주 예산을 의무화합니다.** 정치인들이 단기 예산 통과 수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입법부 의원들에게 장기 재정 해결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정부 지출을 제한하여 정부 예산 책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HON. CRUZ REYNOSO

캘리포니아주 대법관(명예)

HON. DELAINE A. EASTIN

전 공공 교육 교육감

PROF. JAMES FISHKIN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 발의안 제31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1호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거나, 일반 시민의 의견 반영을 늘리거나, 성과를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가 실제로 찬성측 주장이 약속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복잡한 규칙, 제한, 요건을 새로 추가할 뿐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처가 둔하고 느려지며 비용은 늘고 효과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해당 조항들은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여 법원이 그 의미를 파악해 정리하려면 수년간의 소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비용을 늘리고, 관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는 약화시킬 것입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 투표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무시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공기 오염도, 공공 건강, 근로자 안전 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게 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는 세금을 인하할 수도 없고 학교 예산을 늘릴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는 결점이 너무 많아 이를 지지하는 조직의 여러 구성원들은 이 발의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포워드 액션 기금(California Forward Action Fund)의 전 이사회 이사인 Bob Balgenorth는 이 발의안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한층 더 해가 될 것" 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사임 서한을 통해 Balgenorth 씨는 "캘리포니아 포워드가 이 결함들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무장관에게 서명을 제출한 데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결함 투성이 발의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ANTHONY WRIGHT, 전무 이사

헬스 액세스 캘리포니아

LACY BARNES, 상무 이사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LENNY GOLDBERG,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조세 개혁 연합

발의안 제31호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발의안 제31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1호는 심히 부실하게 작성된 법안으로 모순적이며 개혁이 아닌 소송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하고 있지만 발의안 제31호는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점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각종 제약과 부실하게 정의된 요건들만 겹겹이 추가함으로써, 세금 인하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들을 비선출 관료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은 앞으로 수년간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교육 및 기타 핵심적 기능에 필요한 예산 2억 달러를 삭감하여 각종 실험적 카운티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금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교육 예산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주 세입 중 연간 2억 달러를 실험적 카운티 프로그램에 지출하게 될 특수 계정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지출해야 할 돈을 가지고 도박할 때가 아닙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실제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주정부가 충분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개선을 채택하거나 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수년 간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예산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 조항의 상충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정부는 예산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세금을 인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같은 조항의 의도는 주정부에서 세금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 부주의한 법안 작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31호는 이를 주 헌법의 일부로 영구화하려고 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각 카운티들이 중대한 주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중 보건, 수질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중 보건을 보장하고, 공기와 물의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는 지방 정치인이 주민 투표 없이 이러한 법을 변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같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로 인해 추가적인 정부 절차와 관료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정부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 기반 예산 책정이라는 것은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미 수 차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당파적 입법분석관에 의해 실시된 공식 재정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예산 책정 관행을 실시할 경우 일체의 개선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확실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하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상황을 좋기는 커녕 오히려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SARAH ROSE, CEO

캘리포니아 보수유권자연맹

JOSHUA PECHTHALT,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RON COTTINGHAM,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연구 협회

★ 발의안 제31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투명성, 공개 검토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본 정부 책임 법안은 납세자들이 특수 이해 단체와 로비 그룹에 이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환경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보장할 것입니다.”

—Hon. Cruz Reynoso, 캘리포니아 대법관(명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책정 절차를 검증해 볼 때입니다. 더 이상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적자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방식이 아니라 효과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James Fishkin 교수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의 돈을 밀려 지출하려는 유혹을 줄여 줄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학교들이 교육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 투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한 표와 같습니다.”

—Hon. Delaine Eastin, 전임 주 공익 교육장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하면

-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정부가 있지도 않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책정 절차에 투명성이 생길 것입니다.
- 새크라멘토에서 각 시 및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통제력과 신속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www.sos.ca.gov를 방문하셔서 법안을 직접 살펴보고 정부가 더 이상 낭비성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막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1호는 가장 엄격한 헌법 수정 요건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법적으로 유효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책정 절차와 운영관리를 분명히 개선할 것입니다.

BILL HAUCK, 전임 의장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 위원회